

2018년 10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해당사항 없음'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 시청자평가원 의견 제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 프로그램 명 : 바로보는TV 옴부즈맨
- 편성시간 : 본방송 매주 일 04:00~04:30(재방송 매주 월00:30~01:00)
- 방송현황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김흥태	10/7	뉴스센터12,뉴스13,뉴스17,라이브투데이,뉴스오늘	
곽선혜	10/14	뉴스13, 뉴스15, 뉴스오늘, 뉴스20, 뉴스12, 뉴스08	
이정훈	10/21	뉴스리뷰	
이재원	10/28	출발640, 뉴스09, 뉴스포커스, 뉴스13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비고(변경사유 등)
-	-	-	-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18 10/10(일)	김홍태	<p>‘뉴스13’에서는 9월 27일자 보도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정부는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다음 달 금리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음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8일자 뉴스특보와 라이브투데이는 금리상승 기조에도 가계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소비심리도 녀 달 만에 반등하여 집값 전망이 급등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27일자 보도는 앞으로의 경제상황의 추이를 설명하여야 하는 보도이고요, 28일자 보도는 지나간 8월과 9월의 상황을 보도한 내용이었기에 약간은 선을 긋고 불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위 보도들을 접하면 조금은 어리둥절할 수 있기에 보도에 약간의 일관성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즉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28일자 보도에서는 보도 말미에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 이전의 통계 수치임을 밝히며,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있었더라면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조금은 편했을 것입니다.</p>	<p>앞으로는 기사내용이 인용되는 통계나 자료가 생산된 시점을 명확히 밝혀서 시청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9월 28일 보도에서는 성관계 영상 유포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해 뉴스</p>	<p>리벤지포르노는 사회적 범죄인 동시에 피해자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는 사안이라는 점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p>

		<p>를 보도하면서, 이러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실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있어 정신병적 질환과 대인기피증을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스케치했다라면 리벤지포르노의 피해를 좀 더 선명하게 보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p> <p>또한 이러한 사안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통해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삭제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힘든 과정이기에, 먼저 수사기관보다 다른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취재하여 보도한다면 시청자로서는 좀 더 좋은 정보를 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p>	<p>련 보도를 할 때 말씀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p>
<p>2018 10/14(일)</p>	<p>곽선훈</p>	<p><뉴스 12>에서도 가장 먼저 “고양 저유소 실화 혐의 스리랑카인 영장 신청”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말 고양에서 발생한 유류 저장탱크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실화 혐의로 인근 터널 공사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을 어제 긴급 체포했다”며,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인 뉴스의 비중이나 관련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는 점에서 적절한 보도 형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받아도 안전해야 할 저유탱크가 대형 화재로 번지고 진압에 큰 애를 먹었는데 그 원인을 풍등이라고 보도하는 건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고현장에서 1km 떨어진 공사현장에서 날아온 풍등 때문에 저유소가 폭발한 것인지는 앞으로 추가 발표될 수사결과와</p>	<p>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 풍등이 일차적 발화 원인이 됐고, 저유소의 화재 위험 방지가 철저하지 못한 것도 대형 화재로 이어진 요인이 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연합뉴스TV는 후속보도를 통해 풍등 외에 시설의 미비점이나 관리 부실 등도 꾸준히 짚었습니다.</p>

		정밀 조사를 기다려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폭발의 원인이 고작 바람에 날려온 풍등 때문이라면 수만 리터의 기름이 저장된 중요한 국가시설의 기본적인 안전조치의 문제점이 함께 지적되어야 합니다.	
2018 10/21(일)	이정훈	10월 11일 <뉴스 리뷰>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정 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5·24 조치의 해제보다 원인이 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조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 감사에 대한 보도들은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진행된 국정 감사를 차분하게 다루고 현장감을 잘 포함해서 보도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들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보도한 점을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 감사처럼 다양한 사안들이 제시될 때 뉴스 가치나 중요도에 따라 일정 정도 가중치를 두어 제시하는 방식이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시각적 자료를 추가해서 제시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적절하고 유용한 지적입니다. 현실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나열식 보도를 지양하고 종합적이면서 입체적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 10/28(일)	이재원	PC방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흥기로 찢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성수씨의 신원과 얼굴이 공개된 10월22일 [뉴스9]에서는 피의자 김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보도국 기자와 전화 연결로 자세히 전했습니다. [현장연결]의 마지막 부분에는 김씨의 발언이 마무리된 뒤 취재진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는 모습이	현장연결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사건 현장의 경우 포토라인을 설치하더라도 취재진이 뒤엉켜 있는 상황이 많아 방송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예기치 못할 실수를 줄이도록 좀더 주의를 기울이겠

	<p>이 전달되어 아쉬웠습니다. 김씨의 옆에서 질문을 한 기자가 다른 취재진들에게 인터뷰 내용을 설명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취재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 가능한 공조 취재의 모습이기도 하나, 굳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보로 빠르게 김씨의 발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처 영상의 뒷부분을 편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나,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p>	<p>습니다.</p>
	<p>22일 저녁 [뉴스20]에서는 신상공개가 범행의 잔인성과 충분한 증거 등을 토대로 공개를 결정했지만, 일각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짚어주었습니다.</p> <p>무죄 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근거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 과거 신상공개된 범죄자의 인권 침해 문제제기 등 다각도의 후속 보도를 기대해봅니다. 신상을 공개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재발방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뉴스가 사회 감시 기능의 하나로 재발방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p>	<p>말씀하신대로 피의자 신상공개 양면성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보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보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p>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18. 10. 07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358회 - '연합 뉴스TV를 말한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성 성관계영상 유포의 문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스타트업의 거리 축제 등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보도인데요, '뉴스13'에서는 9월 27일자 보도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정부는 우리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다음 달 금리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음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8일자 뉴스센터12와 라이브투데이는 금리상승 기조에도 가계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소비심리도 넉 달 만에 반등하여 집값 전망이 급등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현실 시장에서는 영업 관련 매우 힘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도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9월 27일 <뉴스13>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우리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주열 한은총재는 다음 달 금리인상에 대해 여러가지 변수를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예견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김동연 부총리를 통해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나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같은 반응이지만 고민은 10월 금리인상 여부임을 전하며, 한국은행은 10월과 11월 두 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외금리차를 줄여야 하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으며,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물가와 고용사정이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고 있어 금리를 인상할 만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에, 현재 1.5%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부담임을 전했습니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육박할 정도로 늘었고 이낙연 총리는 부동산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저금리를 지목했음을 전하며, 오는 10월 18일과 앞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9월 28일 <뉴스센터12>에서는 금리상승 기조에도 가계대출금리 큰 폭 하락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3.73%였던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는 8월에 3.66%로 0.07%포인트 떨어졌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월 3.46%를 정점으로 2개월 연속 하락해 지난달 3.36%를 기록했음을 전했습니다. 같은날 <라이브투데이>에서는 소비심리가 넉 달 만에 반등하며 집값 전망이 급등했다고 전하면서, 경기가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소비자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반등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의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 CCSI는 101.7로 지난달보다 2.5포인트 올랐으며, 주택가격전망CSI가 119로 10포인트나 뛰며 2015년 10월의 119 이래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양국 간 금리 차이는 최대 0.75%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는 2007년 7월 이래 최대치라고 합니다. 27일자 보도에서는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추후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전했는데요, 다음 날인 28일자 보도에서는 금리상승 기조에도 가계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소비심리도 넉 달 만에 반등하여 집값 전망이 급등했다고 보도함으로서, 실제 시청자들 입장에서 상반되어 보이는 이러한 보도내용을 어떻게 이해할지 약간은 힘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27일자 보도는 앞으로의 경제상황의 추이를 설명하여야 하는 보도이고요, 28일자 보도는 지나간 8월과 9월의 상황을 보도한 내용이었기에 약간은 선을 긋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위 보도를 접하면 조금은 어리둥절할 수 있기에 보도에 약간의 일관성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즉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28일자 보도에서는 보도 말미에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 이전의 통계 수치임을 밝히며,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있었더라면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조금은 편했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류는 엄청난 지적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서로에게 절대 쥐서는 안 되는 피해를 주는 단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앙심에서 비롯한 과거 성관계 영상의 유포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대인기피로 인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히나 이러한 영상은 삭제하기도 힘들고 처벌을 통해 해결하기도 힘든 어려운 면이 존재하는데요, 9월 28일자 보도에서는 이러한 성관계 영상 유포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9월 28일 <뉴스오늘>에서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리벤지포르노에 내용인데요, 영구적인 삭제가 어려운 데다가

가해자 처벌도 미흡해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도 유포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이미 해당 영상이 인터넷상에 널리 유포된 데다 영상에 남성의 신체가 나오지 않아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고요, 가해자를 특정한다 하더라도 영상을 촬영하는데 서로의 합의가 있었다면, 유포자에게 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일정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해당보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리벤지 포르노 피해는 올 상반기에만 1,295건이라고 전하면서, 피해자의 60%는 성관계 영상이 있는지도 몰랐으며, 서로 아는 사이에서 영상을 촬영한 경우가 70%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몰래카메라 가해자의 90%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법 촬영 영상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 우선하여, 실제 이러한 포르노를 삭제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언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이러한 영상을 어떻게든 삭제하고 싶어 할 것이기에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피해는 우리 누구에게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관심은 처벌보다는 영상삭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통해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삭제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힘든 과정이기에, 먼저 수사기관보다 다른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취재하여 보도한다면 시청자로서는 좀 더 좋은 정보를 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함께 시청자의 한 명으로서 이에 대한 공백을 메꾸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해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한데요, 이러한 것을 반영하듯 창업에 대한 열풍 또한 상당합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젊음의 거리 신촌에서 열린 스타트업 축제를 보도하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9월 29일 <뉴스17>에서는 젊음의 거리 신촌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인 스타트업 거리축제 IF2018에 대하여 보도하며 현장에 뉴스캐스터를 연결했습니다. 뉴스캐스터는 참가자에게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행사에 참여하니까 어떠한지를 인터뷰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맞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사를 즐기고 있음을 전하며, IF2018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이벤트, 공

연, 전시, 프로모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 콘텐츠를 풀어내는 행사임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2회째를 맞았다며 지난해에는 100여 개의 스타트업과 3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고, 올해도 90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임을 전했습니다. 함께 투자자 중심의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연세로가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했음을 전하면서, 요즘 창업의 열기가 뜨겁기에 제2의 저커버그나 제2의 마인을 꿈꾸는 젊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길 바라보며, 축제의 장에 나와 유익한 정보와 깊어가는 가을도 만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전하였습니다. 해당 뉴스는 스타트업의 축제의 장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젊은이들에게 취업이 문이 좁고, 경제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투자의 장이 더 열려야 하는데, 반드시 이러한 투자의 장이 큰 모습을 띠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스타트업에 대한 응원은 매우 필요합니다. 함께 현재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어떠한 형태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신의 사업이 정보에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축제이기에 좋은 축제이고 이를 보도한 모습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좀 더 자주 그리고 자세하게 보도된다면 시청자로서는 매우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는 우리의 경제활동과 젊은이들의 취업 그리고 가을을 즐기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비록 축제는 밝고 즐거운 면이 부각될 수 있는 영역이어야 하지만, 창업이라는 것이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이 많기에, 창업을 하면서 풀어가야 할 점을 약간이라도 보도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 **곽선혜 시청자평가원(18. 10. 14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359회 - ‘연합 뉴스TV를 말한다’>**

지난 10월 7일 일요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화전동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내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화재 당일부턴 <뉴스속보> 형식으로 관련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하고, 발 빠르게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영상 제보자와 전화 연결을 시도하고, 시민의 인터뷰 영상을 담고, 현장 브리핑 소식을 전달하고, 이어서 화재 진압 소식과 이번 사고로 인한 실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화재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우선 화재 당일인 10월

7일 <뉴스 13>에서는 ‘뉴스속보’형식으로 “경기 고양 화전동서 휘발유 탱크 폭발 추정 불”이라는 헤드자막과 함께 관련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석유 저장소 14동 중 1동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고, 다행히 “휴일이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진행중”이라며, “고양시청은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문자를 보내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속보 전달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15>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송유관공사 저유소 주변에 취재기자가 현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여전히 시커먼 연기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늘로 치솟는 화염과 연기가 가득한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보도하면서 진행 중인 진화 작업 상황을 실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화재 사고 관련 영상 제보자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앵커는 제보자에게 화재를 목격한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화재 장소와 거리가 좀 있는 곳에서 목격했는데 화재 장면이 잘 보였는지, 지금 상황은 어떠한지, 관계기관 등에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는지 등을 질문했습니다. 강서구 둔촌동 가양역 인근 오피스텔에 있는 제보자는 영상을 보내고 지금까지도 시커먼 연기가 계속 치솟고 있고 사고지와 거리가 있어 소방차 등의 진화 작업이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고, 본인은 아직 재난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휘발유 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 현장 연결을 했습니다. 먼저 고양소방서장은 “화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 진압대원들이 현장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현장 소식 전달했고, 김영선 대한송유관공사 안전부장이 “휘발유 탱크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휘발유 탱크에 있는 기름을 다른 탱크로 이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설명했습니다. “유류화재기 때문에 일반 물로 쓰게 되면 화재가 더 확산이 되기 때문에 폼액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며 현장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10월 8일 <뉴스오늘>에서는 소방대원들은 큰 불길과 17시간 가까이 사투를 벌였고, 밤샘 진화작업 끝에 당일 새벽 4시쯤 불길은 완전히 잡혔다고 전 날 있었던 화재의 진압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늘 위로 뿜어져 나온 시커먼 연기는 서울에서도 보일 정도였다”며 고양시 시민의 인터뷰 영상을 편집해서 보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했던 최고 대응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가 실제로 대기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보도했습니다. 서울 은평·마포구는 “유해가스가 발생되니 외출을 자제하라”는 주민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대기질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당일 바람이 불어 진압에는 애를 먹긴 했지만, 대기 중 오염물질 축적을 막는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날 <뉴스 20>에서는 “고양 저유소 실화 혐의, 경찰, 스리랑카인 긴급체포”라는 헤드자막과 함께 관련 속보 보도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화재 사건과 관련해 스리랑카인 27살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A씨가 저유소 인근에서 날린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고, 이 불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이번 사고는 스리랑카인이 실화 혐의로 붙잡히면서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됐다 설명하며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와 전화연결을 했습니다. 붙잡힌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로 확인됐으며, 붙잡힌 피의자는 스리랑카인 27살 A씨고 현재 테러 용의점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했습니다.

같은날 <뉴스 12>에서도 가장 먼저 <고양 저유소 실화 혐의 스리랑카인 영장 신청>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말 고양에서 발생한 유류 저장탱크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실화 혐의로 인근 터널 공사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을 어제 긴급 체포했다”며,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했습니다. 취재기자는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추가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저유소 측의 위험물안전관리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경기 고양시 저유소 대형 화재 사건에 대한 관련 보도를 실시간 촘촘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받아도 안전해야 할 저유탱크가 대형 화재로 번지고 진압에 큰 애를 먹었는데 그 원인을 둘러싼 보도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가 발표될 수사결과와 정밀 조사를 기다려 봐야 할 것이지만 정말 폭발의 원인이 고작 바람에 날려온 풍등 때문이라면 언론에서는 수만 리터의 기름이 저장된 중요한 국가시설의 기본적인 안전조치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어야 합니다. 풍등 보다 더 강한 화재 원인에도 화재예방을 위한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했고, 관리공단의 안전 점검과 관리 방식에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재 사건 관련 이번 <연합뉴스> 보도들은 뉴스 프로그램별로 헤드자막은 약간씩 바뀌지만, ‘스리랑카’라는 국적은 빠짐없이 그대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총강 제 6항에는 ‘언론은 고

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되어 있습니다. 제 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부분에는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시점에서 중요한 사실은 일단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것입니다. 용의자의 국적이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증가하면 막연하게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비율이 꽤 높게 조사되고 있는데, 이런 보도 프레임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제노포비아가 일상인 사회는 위험합니다. 혐오와 차별의 시작을 언론이 조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실한 시설관리를 부각하는 책임 있는 프레임과 외국인 국적을 부각하는 프레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레임이 곧 언론사의 능력이고 자질입니다. 앞으로는 <연합뉴스TV> 사건 관련 뉴스 보도 접근에 좀 더 신중하고 세련되게 책임 있는 프레임을 기대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몇몇 산하기관과 법정단체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밤 10시가 넘는 야심한 밤에 유흥업소와 안마업소 등에서 업무추진비와 회의비 명목으로 많게는 수백만원을 썼고, 건설산업기본법 65조 규정에 따라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몇 년 동안이나 몰랐다고 합니다.

10월 9일 화요일 <뉴스08> 보도에서는 “밤10시 안마업소 회의?...수상한 국토부 산하기관”이라는 헤드자막과 함께 충격적인 소식 전했습니다. 관리 감독에 대한 의무가 있는 정부마저 지난 몇 년간 몰랐던 산하기관의 수상한 심야 회동을 <연합뉴스 tv>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 기관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관기관 회의를 한 곳”이라는 기자의 설명과 함께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실 출처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자료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사용일과 지출액, 업종과 소재가 그대로 제시됐습니다. 카드결제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1시가 넘는 늦은 밤으로 업종은 대부분 유흥주점인 룸살롱과 바, 안마업소까지 있었습니다. 유관기관 회의라는 명목 하에 법인카드로 적게는 44만원에서 많게는 285만원을 긁었습니다. 음성변조로 전화 인터뷰를 한 <국토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그 당시 비상임 감사분이 나서서 회의비로 예산배정을 해주거”라며 버젓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는 다른 두 곳 기관도 유사하게 유흥주점에서 회의비를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단순히 한 두 기관의 일탈이 아니라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집착케 하는 대목이라며 분석합니다. 이어서 <국토부 관계자>의 음성변조 전화인터뷰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감사가 워낙 광범위하니깐 이쪽을 보겠다 저쪽을 보겠다

하니깐 못 발견했을 수도 있죠.”라는 황당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단독으로 고발성 보도를 전한 것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흥미 위주의 단발성 보도로 그치지 말고, 기획 보도 형식으로 계속 보도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산하기관과 법정단체들에 어떤 징계들이 이루어졌는지 사후 확인해 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타 기관들도 살펴보고 감사기관과 항목들이 너무 많아 문제라면, 앞으로 어떻게 관련법과 운영규정 개정 등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지 다각도로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연합뉴스TV가 되길 바랍니다.

● **이정훈 시청자평가원(18. 10. 21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36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 떨어진 풍등으로 발생한 대형 화재원인과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 사건은 많은 국민들을 걱정하고 분노하게 만들었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보도하면서 해당 피의자에 대한 조사 상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0월 8일<뉴스리뷰>에서는 이번 저유소 화재로 인한 오염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발생한 연기 띠는 잠실 하늘에서도 보일 정도로 컸고 외출 자제 안내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당일인 7일과 8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 좋음 ’으로 나타났고 오염물질의 농도도 ‘ 보통 ’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하수 오염 우려도 크지 않고 하천으로의 유해 물질 유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10월 10일 <뉴스리뷰>에서는 풍등을 날려 고양시 저유소 화재 피의자로 입건된 스리랑카인이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긴급체포 이틀만에 석방됐다고 전했습니다. 혐의에 대한 소명과 인과관계 입증에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고 전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실화를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강조했는데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결국 기각되면서 경찰의 무리한 영장신청이었다는 질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저유소 화재는 송유관공사의 부실관리가 더해져 인재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풍등에 의한 발화로 폭발로 이어진 18분 동안 송유관공사측은 인지하지 못했는데 해당 저유소에는 45대의 CCTV와 당직자 4명이 있었지만 모니터링 전담 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 측이 사고 초기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운영 등의 초동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기름 탱크 주위가 인화성 높은 잔디로 덮여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8 곳 저유소 가운데 탱크 주변에 잔디를 심은 곳은 고양 저유소가 유일하지만 탱크 외부에는 화재나 연기를 감지하는 센서가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위험물안전관리 과정에서 공사 측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1일<뉴스 리뷰>에서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둘러싼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수사 절차와 방향, 적용 혐의가 적절했는지 등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원들은 스리랑카인에 대한 영장 신청과 긴급체포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수사 적용 혐의와 수사 대상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민감룡 청장은 시간에 쫓겨 수사하다보니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고양시 저유소 화재에 대한 보도는 사안의 중요도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하게 다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화재를 촉발한 것으로 알려진 풍등을 날린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로 맞춰졌는데 해당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관심을 끌만한 특이한 사안을 중심으로 흥미 위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운 보도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유소라는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많지 않고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나 인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화재 사건에 대한 단순 보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칫 불필요한 오해나 공포를 조성할 수도 있고 국가 기간 시설물에 대한 논의들은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 주민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사에 의한 학교 폭력에 대한 보도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10일 <뉴스리뷰>에서는 어린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유치원 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학부모들은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하면서 잦은 폭행에 노출돼 심리 치료를 받은 아이까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폭력을 휘두른 26살 A 교사를 해고하고 학부모들에게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대로 A 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특수학교 교사들이 장애학생들을 폭행했다

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학교 A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고소를 접수받아 수사 중인데 사건 발생 전 3개월간의 학교 CCTV 영상 조사 결과 폭행 10여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다른 학생 1명도 폭행을 당했고 폭행에 가담한 교사가 1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별장학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1일<뉴스리뷰>에서는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피의자로 입건된 교사는 무려 10여 명으로 피해 학생들은 3개월 동안 수십 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등갓길에 담임교사의 폭행을 목격한 학부모의 고소로 시작된 경찰 조사는 지난 5월부터 3개월치 CCTV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폭행 피해를 확인하였고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는 10여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들에게 출근금지 조치를 내리고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연이은 장애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사건이 발생한 특수학교에 대해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학생·학부모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장애학생 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칭 ‘행동문제 특별지원단’을 만들어 장애학생과 보호자,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은 시청자들에게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교 폭력은 사회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의 조사 과정이나 책임 주체들의 대처법을 차분하게 보도한 점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피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처리 절차나 단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폭력과는 다르게 가해자와 중재자 혹은 관리자가 동일한 이러한 사건들은 폭력에 의한 일차적 피해만이 아니라 추후 조사 과정에 벌어지는 이차 피해도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보도를 상당한 비중을 두고 진행하였고 국정 감사의 진행상황을 차분하면서도 다양하게 다루었습니다. 10월 10일 <뉴스리뷰>에서는 총 753곳의 피감기관에 대한 20일 간의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고 전하면서 이번 국정 감사의 쟁점 현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과 탈원전 등을 예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야당의 공세에 대비한 차단막을 치는데 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직전 장관의 교체는 정책실패를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태도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야당 위원들이 퇴장하며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지만 본격 질의에서는 여야 모두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비판했고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집에 대한 압수영장 기각 사유를 놓고 질타가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지시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침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가 표시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의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했던 신창현 의원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수차례 대책에도 집값이 요동쳤다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자금자족형 신도시를 위한 교통 인프라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강조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1일 <뉴스 리뷰>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정 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5·24 조치의 해제보다 원인이 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조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당이 5·24 조치와 같은 대북 제재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여당은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영문 관세청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유은혜 부총리를 국감에서 배제시키면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때 국감장을 집단 퇴장하고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도 받지 않

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장을 또 다시 인사청문회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장악’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으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져 국감이 지연되었고 발표가 연기된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나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것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를 허위 조작 정보로 범위를 줄이고 현행법을 통해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 규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12월에 발표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선 최저임금으로 고용사정이 나빠졌다고 몰아붙였고 여당에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일정 수용하면서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옹호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 감사에 대한 보도는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 동시에 제한된 기간 내에 다양한 사안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보도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 감사에 대한 이번 보도들은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진행된 국정 감사를 차분하게 다루고 현장감을 잘 포함해서 보도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들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보도한 점은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 감사처럼 다양한 사안들이 제시될 때 뉴스 가치나 중요도에 따라 일정 정도 가중치를 두어 제시하는 방식이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시각적 자료를 추가해서 제시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재원 시청자평가원(18. 10. 28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36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뉴스와 국민연금 문제 등 다양한 뉴스를 전했습니다. PC방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흥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성수씨의 신원과 얼굴이 공개된 10월22일, 연합뉴스TV는 [출발640]에서 엄벌 요구 국민청원 역대 최고치 소식을 보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뉴스09]에서는 공개된 신원을 전했고, 오전 11시 김씨가 카메라 앞에 서는 모습을 속보로 생생히 전하는 등 발 빠르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뉴스20]에서는 신상 공개의 의미와 우려점을 짚어주었습니다.

먼저, 아침 시간대 뉴스인 [출발640]에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을 엄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가 역대 최고치를 넘겼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앞, 시민들이 마련한 추모공간에 놓인 국화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짧은 메모부터 평상시 고인의 모습을 기억하는 장문의 편지까지 각종 글들이 놓인 모습을 스케치하는 것으로 시작해 국민청원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 감형은 없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닷새 만에 75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보도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75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짚어주었습니다. 청원 마감일인 다음달까지 100만 명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강서경찰서를 방문해 엄정 수사를 강조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발언 영상을 직접 삽입해 현장감 있게 보도를 하였고, 김 씨의 동생이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데 대한 논란, 김 씨가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는 점 등 맥락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이어 [뉴스09]에서는 피의자 김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보도국 기자와 전화 연결로 자세히 전했습니다. 기자는 경찰이 피의자가 29살 남성 김성수라고 밝혔다는 소식을 전화로 신속히 전해주었습니다.

이어 김씨가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동하며 카메라 앞에 선 현장을 [현장연결]로 내보냈습니다. 김씨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우울증 진단서는 자신이 낸 것이 아니며,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짓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는 모습이 속보로 전해져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슈를 꼼꼼히 추적하였습니다. [현장연결]에서 다뤄진 내용이 [뉴스13]에서는 보다 정돈된 영상 편집으로 전달되었으나, [현장연결]의 마지막 부분에는 김씨의 발언이 마무리된 뒤 취재진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는 모습이 전달되어 아쉬웠습니다. 김씨의 옆에서 질문을 한 기자가 다른 취재진들에게 인터뷰 내용을 설명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취재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 가능한 공조 취재의 모습이기도 하나, 굳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보로 빠르게 김씨의 발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처 영상의 뒷부분을 편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나, 아쉬운 부분이었

습니다. 김씨의 신상공개가 이뤄진 이날 저녁 [뉴스20]에서는 신상공개가 범행의 잔인성과 충분한 증거 등을 토대로 공개를 결정되었지만, 일각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짚어주었습니다. 먼저, 보도는 신상공개 결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해주어 시청자들이 궁금해할만한 사안을 잘 해설해주었습니다. 보도는 김씨의 신상공개는 경찰이 개최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배경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는 지난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에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리포팅하며,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등의 법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하여 시각 정보를 보완하였습니다. 이 기준이 2009년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다는 점과, 이후 경찰이 잔혹범죄의 경우 심의회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며, 지난해 여중생 딸의 친구를 납치하고 살해한 뒤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례를 당시 영상과 함께 제시해주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보도는 이같은 맥락에서 김씨의 신상공개도 이뤄진 것이라고 배경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신상공개를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인데, 이번 사건 역시 범행 현장 CCTV 공개 이후 용의자에 대한 비판 여론과 빗발치는 신상공개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피의자 측이 경찰에 김씨의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도 이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 또한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고 짧게 리포팅을 하였는데, “신상공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리포팅에 비해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언급은 공개의 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다루어진 점이 아쉬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근거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의사 결정 구조, 과거 신상공개된 범죄자의 인권 침해 문제제기 등 다각도의 후속 보도를 기대해봅니다. 신상을 공개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재발방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뉴스가 사회 감시 기능의 하나로 재발방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합뉴스TV는 10월22일 국민연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뉴스09]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은 41만9,968명에게 1인당 평균 월 240만원

이 지급되었으며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최고액 수급자는 매달 720만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의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5월 기준 447만877명,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에 그쳐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도 월 204만5,550원으로 공무원연금 최고 수급액의 28%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현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매달 받는 연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에 대한 해설을 해주었습니다. 보도국 기자는 공무원연금으로 7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은 공직에 40년 가까이 일한 전직 헌법재판소장과 전직 대법원장, 서울대총장 등 4명이라고 현상을 설명해주었습니다. 기자는 현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먼저 연금간 가입기간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30년째, 공무원연금은 1960년부터 시작해 58년째를 맞았으며, 보험료율도 국민연금이 9%, 공무원연금은 17%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 있어 두 연금간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으로 700만원 넘게 받는 이들은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에 수급액이 정해졌는데, 당시 퇴직 직전 3년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결정했었다는 점,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다는 점 등 공무원연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궁금해 할만한 사안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즉 현재 받는 임金的 얼마만큼을 연금으로 주느냐를 따져보면 현재 45%에서 2028년에는 40%로 줄어들 예정이며, 그나마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 탓에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들고 보험료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연금액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높이는 대책은 세대에 따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천천히 올리며 노후보장에 무게를 두는 안과 재정안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고 보험료를 크게 올려야 한다는 안 등을 바탕으로 11월 안에 정부가 여러 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다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가 벌어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국민연금 관련 단순 보도에서 원인을 짚어주는 심층 보도로 국민의 궁금증을 다각도로 해소해주었습니다. 향후 최근 증가한 공무원들은 현

행 공무원연금법에 그대로 적용을 받는지, 국민연금이 단지 국민의 납입금만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앞서 잘못 운용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해가는지 등을 심층 취재해주길 바랍니다

※ 대표 방송스틸컷

<p style="text-align: center;">일시/장면설명</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10월 07일 04시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일시/장면설명</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10월 14일 04시 / 곽선희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일시/장면설명</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10월 21일 04시 / 이정훈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일시/장면설명</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10월 28일 04시 / 이재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